



이슈와 논점



이슈와 논점 | 제1065호 | 2015년 9월 22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임성호 | www.nars.go.kr

정부 소비축진 방안의 쟁점 및 보완대책

이수진* · 김민창**

1. 들어가며

최근 민간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그 원인과 향후 회복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민간소비는 실질임금 상승,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주택시장 활성화, 유가 안정 등 소비 증대 요인에도 불구하고 2015년 상반기 중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에 그쳤다. 특히 2/4분기 중에는 메르스로 인한 불안 심리로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중심으로 단기적인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전기 대비 0.3% 하락하였다.¹⁾

이에 2015년 8월 26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소비부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 소비심리 개선대책이 긴요하다는 판단하에 소비축진 방안을 마련한 것이나, 소비위축 원인에 대한 진단과 개별소비세 부담 경감 등 세부 방안의 적절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소비축진 방안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보완대

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정부의 소비축진 방안²⁾

(1) 배경

정부는 소비축진 방안을 발표한 배경으로 메르스 영향 등으로 소비 전반에 부정적 충격이 발생하였으며, 7월 이후에도 회복 모멘텀이 공고하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심리위축으로 소비성향이 지속 하락하고 있어 소비심리가 조기에 회복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는 신흥국 경제 불안 등의 대내외 리스크 증가와 맞물려 소비부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소비심리 조기회복을 목표로 소비축진 방안을 발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 주요 내용

정부의 소비축진 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이다. 연말까지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 상반기 경제동향 특집」, 『NABO 경제동향&이슈』 제36호, 2015.

2) 관계기관 합동, 「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방안」, 2015.8.26.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30% 인하하기로 하였다.³⁾ 또한,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용단, 보석, 귀금속에 대한 과세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⁴⁾ 이상의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방안은 모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둘째, 대규모 세일 행사 개최 및 관광·여가 활성화이다. 8월 14일부터 10월 31일 중 개최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내국인을 포함한 전국적 합동 세일로 확대 실시하고, 전통시장·슈퍼마켓·온라인 쇼핑몰 등도 참여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⁵⁾ 추석연휴를 전후로 병행수입물품에 대하여 5% 이상 할인을 적용하도록 하고, 가을 중 카드사 할인·프로모션을 집중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을 관광주간 개최⁶⁾, 가을휴가 활성화 등을 통해 관광·여가활동을 촉진하는 방안, 대중 골프장을 중심으로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⁷⁾도

- 3) 이에 따라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의 세율은 5%에서 3.5%로, 녹용 및 로열젤리와 방향용 화장품의 세율은 7%에서 4.9%로 낮아지게 되었다.
- 4) 가구의 경우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 금액에 부과되던 것을 1조당 1,500만원 이상 또는 1개당 1,000만원 초과 금액에 부과하기로 하고, 기타 제품은 200만원 초과 금액에 부과되던 것을 500만원 초과 금액에 부과하기로 하였다.
- 5) 백화점·마트 등은 ‘유통업체 대규모 합동 프로모션’(10월 중),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8월·9월·11월), 슈퍼마켓은 ‘나들가게 그랜드 세일’(9월 12일~21일), 온라인 쇼핑몰은 ‘싱싱코리아’(8월·11월) 등을 각각 개최할 계획이다.
- 6)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5년 가을 관광주간’을 개최하여 전국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할인, 교통시설 할인 운영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담고 있다.

셋째, 정부·기업이 합심하여 선도적 소비제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공공부문 외에 기업도 가을휴가 실시에 적극 동참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 농산물 구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주택연금 활성화 및 소비재 수입부문 경쟁 제고이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대상주택 등 가입요건을 완화⁸⁾(「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사항)하고, 주택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일몰을 2015년 말에서 2018년 말로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재 수입부문 경쟁 제고를 위해 병행수입 적법통관 인증 및 진품보증, AS를 대폭 강화하고, 해외직구 특급택송화물 운임을 30% 인하하며,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⁹⁾할 계획이다.

3. 주요 쟁점 및 문제점

(1) 소비심리 위축의 원인

정부는 소비심리 위축의 원인으로 메르스 영향을 꼽고 있으나, 최근 계속되고 있는 민간소비의 부진은 둔화된 가계소득 증가와

- 7) 캐디·카트 선택제 실시 유도, 조성비법인(회원제골프장이 의무 예치한 자금으로 설립한 법인)이 운영 중인 대중 골프장의 그린피 인하, 환불·정산 관련 약관 개정 등
- 8) ·연령: 주택소유자 60세 이상→부부 중 고령자 60세 이상
·대상주택: 9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주택가격 한도 폐지 추진(단, 가격최고 인정금액은 9억원 유지)
- 9) 과세가격(물품가+운송료+보험료 등) 기준 15만원→물품가격 기준 150불

미래를 대비한 가계의 저축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5년 2분기 현재 가계소득(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소득)은 월평균 427만원 수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11만8천원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실제 소비할 수 있는 처분가능 소득은 같은 기간 338만원에서 348만3천원으로 10만3천원 가량 증가하는데 그쳤다.¹⁰⁾ 소득이 다소 증가함에도 가계가 소비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저축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가계가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이유는 늘어난 가계부채와 주거비용의 상승, 고령화에 따른 생활 불안감 등 미래지출에 대비한 예비적 목적 때문이다.

(2) 개별소비세 부담 경감의 효과

금번 정부의 소비촉진 방안의 핵심을 이루는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은 소비 진작 및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정책수단의 적정성 측면에서 본세율(법률 개정 사항)이 아닌 탄력세율 인하(시행령 개정 사항)를 택한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에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절에 필요한 경우”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율 인하가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라는 점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집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개별소비세 인하 시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의 개별소비세수는 크지 않으며¹¹⁾, 2015년 세법 개정안에서 개별소비세 폐지를 예정¹²⁾하고 있는 품목들로서 소비 진작 및 내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하는 승용차가 소매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용규모나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점을 감안할 때 그 효과가 비교적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승용차나 대용량 가전제품의 경우 비교적 사용기간이 긴 내구성 소비재로서 소비 진작의 효과가 일회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한시적 세율 인하가 종료될 경우 오히려 소비가 감소할 수도 있다.¹³⁾ 또한, 기업들의 사내유보 경향을 고려할 때, 판매이익 증가가 투자·배당·임금 증가 등으로 연결될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과세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은 2001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기준금액을 물가·소득 수준 상승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기존 금액과 변경 금액 사이 구간 재화의 소비를 일정 부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시차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10) 가계소득 대비 처분가능소득 비중은 하락세를 보이며 2014년 기준 81.3%를 기록하였으나, 가계소득 대비 비소비지출 비중은 상승세를 보이며 2014년 기준 18.7%까지 상승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전계서).

11) 2013년 개별소비세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녹용·로열젤리의 납부세액은 없으며, 방향용 화장품의 납부세액은 9억 7,700만원에 불과하다(국세청, 『2014 국세통계연보』, 2014.).

12) 기획재정부, 「2015년 세법개정안」, 2015.8.6.

13) 2012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적용한 바 있는데, 다음 해 1~2월 승용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분석이 있다.

부과가 단일 세율 부가가치세제의 역진성 보완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점에서 과세 축소 혜택의 역진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보석 및 귀금속의 경우 고가품 시장의 음성화 및 무자료거래 성행, 탈세¹⁴⁾ 등으로 정상적인 생산·유통경로가 차단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 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3) 기타 소비촉진 방안의 적절성

기타 정부의 소비촉진 방안 중 상당 부분은 정책·제도 개선이나 인프라 구축 등 전통적 정부 영역이 아니라 민간 영역이 수행해야 하는 것들이다. 가령, 카드사 할인·프로모션 실시, 병행수입업체의 병행수입품 할인 및 배송대행업체 배송료 할인, 특급택송업체 할인¹⁵⁾ 등의 경우 정책수단의 선택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협치(協治) 패러다임의 일환으로 민간의 협조를 구하고 유도·장려할 수는 있겠으나, 세부 집행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자율성에 대한 간섭과 개입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향후 보완대책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소비부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소비촉진방안에 더해 중장기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 2013년 보석 및 귀금속제품의 개별소비세 납부세액은 48억 4,300만원에 불과한데, 국내 시장규모를 감안할 때 정상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5) 정부는 할인 실시 여부와 할인폭 등을 비교적 소상히 제시하고 있다.

먼저 소득과 관련하여 2014년에 정부가 도입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¹⁶⁾의 정책 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동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내년 초에는 정책 효과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미비점 보완 등 가계소득 증가를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거비 상승과 관련해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 전세와 월세 등에 대한 대책으로 월세 세제지원 확대와 저금리 전세 보증금 대출확대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노후의 생활불안과 관련하여 공적연금 정비와 의료지원시스템 확충을 통해 개인의 노후소득 감소와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켜 소비심리 위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나오며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소비촉진대책은 금년 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위주로 단기적인 정책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비위축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 소비를 회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주거비 상승과 노후 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해소할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16)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2014년에 도입한 것으로 2015년부터 3년간 시행된다.